



장애인 실태조사가 우리 사회에 주는 울림

이승기 | 장애인복지학회 회장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990년 장애인 실태조사가 시작된 후 8번째로 실시된 2017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장애인 실태조사는 3년마다 전국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전국 가구 중 3만 6200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조사를 하였으며 그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심층 조사가 이루어졌다.

장애인 실태조사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전반적인 생활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하고 객관적인 조사이므로,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장애인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가장 명확하고 선명하게 알려주는 자료라고 할 것이다. 장애인구수, 연령별 장애인 수, 장애 발생 원인, 장애인의 건강 상태, 일반적인 사회적 특성, 일상 생활, 경제 상태, 복지서비스 수요 등을 조사하는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에 대한 정보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장애 추정 인구수는 267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5%가량이며, 장애인 중 65세 이상 인구가 47%로 절반에 육박한다. 또한 장애인이 된 원인으로 후천적인 요인이 88%에 이른다. 즉, 장애는 주로 후천적인 것이고 장애 문제가 노인 문제와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을 가진 비율이 81%로, 거의 대부분의 장애인이 만성질환에 노출되어 있다. 만성질환의 숫자도 평균적으로 2.2개에 달해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

다행인 것은 장애인의 생활 만족도와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가 지난 조사에 비해 소폭이나마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다만, 가족과의 관계, 결혼생활의 만족도는 낮아져서 전반적인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겪는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장애인 중 20%만이 차별이 없다고 답해 지난 조사 수준인 27%보다 개선되지 않았다. 일상생활 영역에서 이동이나 돌봄을 받는 정도에도 큰 변화가 없다.

경제적 상태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42만 1000원으로 2014년 조사의 223만 5000원보다 8.3% 높아졌지만, 월평균 지출이 190만 8000원으로 2014년 조사의 170만 6000원보다 11.8% 증가한 것을 감안한다면 호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장애인 취업자 비율도 36~37% 수준으로, 지난 조사와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소득보장(41.0%), 의료보장(27.6%), 고용보장(9.2%) 순으로 별반 변화가 없다.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관한 요구는 지난 조사 1.2%에서 이번에 6%로 증가하였는데, 이 부분 정도가 눈에 띄는 변화로 보인다.

이상의 장애인 실태조사 내용을 통해 장애인의 삶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장애인은 우리나라 인구의 5%로 전반적인 고령화 추세를 맞이하고 있으며, 후천적 장애 발생을 주된 원인으로 갖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나

아지지 않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데 비해 건강 상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또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적 상태도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은 소득보장을 최우선으로 하여 일상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보장 및 고용보장에 대한 욕구를 여전히 표출하고 있으나 별반 개선되지 않고 개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취할 선택지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장애인이 된 것은 유감이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사회의 발전에 따라 장애인의 삶도 점진적으로 나아지기를 기다리자는 입장이다. 또 하나는,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겪는 불편은 사회적 지원에 의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문제이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자는 입장이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후자의 입장이 대다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암묵적인 생각일 것이지만, 현실에 이르면 전자의 입장도 무시할 수 없다. 후자는 사회적 비용,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조세를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증세 내지 세출의 조정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는 현재에 안주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적으로는 후자를, 현실적으로 전자를 택하기 쉬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장애인 실태조사가 사회에 주는 울림은 후자를 향해 사회가 전환되기를 바라는

것임에도 이것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는 것은, 장애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 있다. 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

첫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등한 삶에 대한 목표를 확고히 하는 것이다. 이동의 문제가 있는 장애인에게 비장애인이 누리는 이동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고용에서도 적어도 비장애인의 취업률에 유사하도록 정책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소득보장에서도 비장애인과 동질의 삶을 보장하는 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감소와 인식 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장애인이 신체적·정신적 제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비장애인과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사회가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차별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지속적으로 제고될 때 가능할 것이다. 제도권 내에서의 교육과 더불어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또한,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사회적·경제적 기여에 따라 판단하기에 앞

서 장애인을 존재로서의 인간으로 바라보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실태조사는 장애인의 삶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 설정 아래 제도 개선과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그래서 3년마다 그 변화의 결과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조사가 되면 좋을 것이다. ■